

2019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 정 장 (1교시) -



성 명 :

응 시 번 호 :

응시자 유의사항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해 양 경 찰 청

형사소송법

1. 다음 중 공판절차의 갱신사유가 아닌 것은?

- ① 공판 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을 때
- ②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취소된 때
- ③ 피고인의 심신상실로 인해 공판절차가 정지되었다가 정지사유 소멸 후 재개된 경우
- ④ 파기환송 후 원심법원이 공판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경우

2. 다음 각 빈 칸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 ㉠ 항소의 제기기간은 ()일로 한다.
- ㉡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시간 이내에 「형사소송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 ㉢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불법체포·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매월 ()회 이상 관하 수사관서의 피의자의 체포·구속 장소를 감찰하게 하여야 한다.
-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 ① 66 ② 59 ③ 42 ④ 37

3. 임의성 없는 자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임의성 없는 자백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도 증거능력이 없다.
- ② 임의성 없는 자백은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 ③ 비변호인과의 접견이 금지된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임의성이 부정된다.
- ④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4. 다음 중 압수물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분이 아닌 것은?

- ① 환가 ② 폐기
- ③ 제출인 환부 ④ 몰수

5. 전문증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간이공판절차에서는 검사·피고인·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전문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증거일지라도 증거동의를 의제되어 증거능력이 부여된다.
- ② 원진술의 존재 자체 또는 그 내용인 사실이 요증 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다.
- ③ 휴대전화로 협박내용을 반복적으로 보냈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출된 ‘전송된 문자 정보를 휴대전화 화면에 띄워 촬영한 사진’에 대해 피고인이 성립 및 내용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 이는 유죄 인정의 증거가 될 수 없다.
- ④ 임의성 없는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증거라도 증거동의를 거치면 유죄증거이다.

6.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판례의 입장과 가장 다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외국에 거주하는 참고인과의 전화대화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기재한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 보고서는 원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면 증거능력이 없다.
- ②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사법경찰리의 면전에서 자백한 진술에 따라 사고당시의 상황을 재현한 사진과 그 진술내용으로 된 사법경찰리 작성의 실황조사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사용이 불가능하다.
- ③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의하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 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④ 피고인이 제1심 법정 이래 공소사실을 계속 부인하는 경우, 증거목록에 피고인이 경찰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기재되었다면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7. 다음 중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규정된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원진술자인 유아가 공판정에서 진술한 경우라도 증인신문당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일부가 재현불가능하게 된 경우
- ㉡ 증인이 「형사소송법」에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 ㉢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환문하고자 하였으나 외교통상부로부터 현재 일본측에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양국 형법 체계상의 상이함을 이유로 송달에 응하지 않고 있어 그 송달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경우
- ㉣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소환받고도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 ㉤ 10세 남짓의 성추행 피해자인 진술자가 만 5세 무렵에 당한 성추행으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판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 ㉥ 진술을 요할 자가 일정한 주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법원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구인하여도 구인장이 집행되지 않는 경우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8. 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공소시효의 결정기준은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이고,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할 경우에는 가중한 형이다.
- ②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된다.
- ③ 공소제기 후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변경된 범죄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되고,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④ 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9. 자백의 보강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뇌물수수자가 무자격자인 뇌물공여자로 하여금 건축공사를 하도록 받도록 알선하고 그 하도급 계약을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사와 관련된 각종의 편의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들은 뇌물공여자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② 2010. 2. 18. 01:35경 자동차를 타고 온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후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해 갔다고 한 甲의 진술과 2010. 2. 20.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에서 나온 필로폰 양성 반응은 피고인이 2010. 2. 18. 02:00경의 필로폰 투약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도로교통법」 위반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 ③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될 수 없다.
- ④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10. 기판력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사기 및 사기미수죄’는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 ②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미치지 아니한다.
- ③ 범칙행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범칙행위의 동일성을 벗어난 형사범죄 행위에 대하여는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④ 행형법상의 징벌은 수형자의 교도소 내의 준수 사항 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행정상의 질서벌의 일종으로써 사회일반의 형벌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는 그 목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징벌을 받은 뒤에 형사처벌을 한다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11. 일부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판결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므로,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유죄 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한다.
- ② 피고사건의 판결 중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부분만을 불복대상으로 삼아 상소가 제기된 경우, 상소의 효력은 그 부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본안에 관한 판단 부분에까지 미쳐 그 전부가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 ③ 수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항소심이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의 판결을 하고, 그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고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만 이유 있는 경우,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죄와 무죄로 인정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면 항소심판결의 유죄 부분도 무죄 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 ④ 제1심이 단순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한 경우에 피고인만이 항소하여도 그 항소는 그 일죄의 전부에 미쳐서 항소심은 무죄 부분에 대하여도 심판할 수 있다.

12. 각종 서류의 증명력 판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공판준비절차, 공판기일 외의 증인신문·증거보전절차·검증에 대해서는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② 진술조서의 기재 중 일부분을 믿고 다른 부분을 믿지 아니하여도 그것이 곧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③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두 개의 서로 다른 내용이 기재된 공판조서가 병존하는 경우, 그중 어느 쪽이 진실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따를 수밖에 없다.
- ④ 형사재판에 있어서 처분문서를 배척하는 이유를 판결에 설시하지 않은 것은 경험칙 내지는 논리칙에 위배된다.

13. 진술거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조사대상자의 진술 내용이 단순히 제3자의 범죄에 관한 경우가 아니라 자신과 제3자에게 공동으로 관련된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제3자의 피의사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기도 하여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② 진술거부권은 현재 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 수사 또는 공판절차에 계속 중인 자뿐만 아니라 장차 피의자나 피고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도 보장되지만 행정절차나 국회에서의 조사 절차에 있어서는 보장되지 아니한다.
- ③ 수사기관이 피고인들의 필로폰 수입에 관한 범의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필로폰이 들어 있는 곡물포대를 전달한 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조사한 경우에, 조사받을 당시 또는 그 후라도 참고인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수사를 개시할 피의자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었다면, 진술거부권 불고지로 인하여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없다.
- ④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 잡은 것이다.

14. 공소장변경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공소장변경 없이 비지정문화재수출미수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을 비지정문화재수출예비·음모죄로 인정할 수 없다.
- ②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 때문에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이 위법한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을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 ④ 공소제기된 강제추행치상죄가 입증되지 않고 강제추행죄만 입증되는 경우 법원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은 적법하다.

15. 다음은 통신제한조치 또는 감청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감청에 해당하지 않지만, 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만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 ㉡ 통신제한조치 허가서에 의한 대화의 녹음·청취는 반드시 집행주체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집행주체가 제3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대화의 녹음·청취’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제3자에게 집행을 위탁 할 수 없다.
- ㉢ 甲이 휴대전화기로 乙과 통화한 후 예우차원에서 바로 전화를 끊지 않고 기다리던 중 그 휴대전화기로부터 乙과 丙이 대화하는 내용이 들리자 이를 그 휴대전화기로 녹음한 경우, 이 녹음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 인터넷 통신망을 통하여 흐르는 전기신호 형태의 패킷(packet)을 중간에 확보하여 그 내용을 지득하는 ‘패킷 감청’은 그 특성상 수사목적과 무관한 통신내용이나 제3자의 통신내용까지 감청될 우려가 있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상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6.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 ② 즉결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선고형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 ③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즉결심판을 함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즉결심판절차에서는 공소장일본주의가 배제된다.
- ④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17 다음은 공소사실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1992년 2월경부터 1996년 6월 7일경까지 성명불상자들이 세관장에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관세를 포탈하여 반입한 손목시계 9개 시가 합계 4,230만원 상당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 성명불상의 중간상인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구입하여 이를 취득하였다.’고 기재한 경우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
- ② 공소사실의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면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공소제기는 효력이 없다.
- ③ 공모공동정범에 있어 실행정범의 인적사항이 적시되지 아니하고 범행일시나 장소가 명백히 표시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공모관계, 실행정범의 실행행위가 모두 표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피고인이 1999년 5월 중순경부터 같은 해 11월 19일경까지 사이에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등의 혈관에 주사하거나 음료수 등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의 경우, 그 공소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18. 재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경합범 관계에 있는 A죄와 B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이 확정된 판결에서 A죄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하지만 B죄 부분을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는 없다.
- ② 피고인이 원판결 이후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을 받은 경우라면, 재심절차에서 형을 다시 선고함으로써 특별사면에 따른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상실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 ③ 재심개시절차에서는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 외에도 재심사유가 재심대상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가의 실체적 사유를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
- ④ 재심청구인이 재심청구를 한 후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나 친족 등이 재심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으므로 재심청구절차는 종료된다.

19. 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치료감호의 요건은 사법적 판단에 맡기면서 치료감호의 기간은 사회보호위원회가 정하도록 한 경우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② 수용자가 구치소 및 교도소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알몸 상태로 가운만 입고 전자영상장비에 의한 신체검사기에 올라가 다리를 벌리고 용변을 보는 자세로 쪼그려 앉아 항문 부위에 대한 검사를 받은 경우 인격권 내지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 ③ 형사재판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징계혐의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
- ④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송치처분과 직업 없음을 기재하였더라도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하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있다 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 「헌법」 상의 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조항이나 평등조항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

20.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 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적으로도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지도 아니한 채 강제채혈한 피의자의 혈액 중 알콜농도에 관한 감정이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감정결과보고서 등은 위법수집증거로써 증거능력이 없다.
- ②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일단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면 그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하여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
- ③ 피고인이 주장하는 불법연행 등 각 위법사유가 사실인 경우, 그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를 배제할 뿐만 아니라 공소제기의 절차 자체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 ④ 음란물 유포의 범죄혐의를 이유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를 발견하자, 피고인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하였으나 그 다음 날 피고인을 석방하고도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사안에서, 위 압수물과 압수조서는 「형사소송법」 상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로써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21. 「헌법」에 명시된 형사절차에 관한 규정은?

- ①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② 자백보강법칙
- ③ 전문법칙 ④ 법정증거주의

22. 함정수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경찰관이 노래방 도우미 알선 영업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그에 대한 첩보가 없는데도 손님을 가장하고 잠입해 도우미를 불러낸 경우 피고인의 범의를 유발케 한 것으로 위법하다.
- ②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그 수사에 기하여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원은 무죄판결을 하여야 한다.
- ③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 ④ 경찰관이 부축빠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흔들자 현장에서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이다.

23.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이 인정된다.
- ②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 ③ 변사자는 범죄발견의 단서가 될 수 있으며, 변사자의 검시는 수사 전의 처분으로써 검사의 명령 없이 사법경찰관의 권한으로 이루어진다.
- ④ 고소는 대리에 의해서도 가능하지만 대리인이 고소할 때 위임장을 제출하거나 대리라는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4. 고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 ② 절대적 친고죄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③ 고소를 할 때는 소송행위능력, 즉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나 고소능력은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다.
- ④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피해자로서 신문하였는데, 그 중 범인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권자의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어도 이를 적법한 고소로는 볼 수 없다.

25. 소말리아 해적인 피고인들이 아라비아해 인근 공해상에서 대한민국 해운회사가 운항 중인 선박을 납치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선원 등에게 해상강도 등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국군 청해부대에 의해 체포·이송되어 국내 수사기관에 인도된 후 구속·기소된 사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라고 정하고, 여기서 ‘현재지’라고 함은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현재한 장소로서 임의에 의한 현재지 뿐만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이에 해당한다.
- ②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하 ‘검사 등’이라고 한다.) 아닌 이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③ 여기서 ‘즉시’라고 함은 반드시 체포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하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를 지연하거나 체포를 계속하는 등으로 불필요한 지체를 함이 없이’라는 뜻으로 볼 것이다.
- ④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후 현행범인을 구속하고자 하는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26. 고소·고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고소불가분의 원칙은 친고죄뿐만 아니라 반의사불벌죄의 공범자 사이에도 적용된다.
- ② 즉시고발의 경우 피고발인 1인에 대한 고발의 효력은 그 피고발인에 대하여만 미칠 뿐이고 다른 공범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 ③ 고발의 경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발하지 못한다.
- ④ 고발은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27. 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피의자신문에 있어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써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④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으며, 출석한 경우에도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다.

28. 수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법률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 ②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서류에 대한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 ④ 변사자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도 영장이 있어야만 검증을 할 수 있다.

29. 체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이다.
- ②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 ③ 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로 한다. 다만, 법원 또는 법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7일을 넘는 기간을 정할 수 있다.
- ④ 체포영장을 청구함에 있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30.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란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③ 사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하여 수사기관에 인도한 경우 수사기관이 그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수사기관이 사인으로부터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④ 수사기관이 현행범인을 직접 체포한 경우와는 달리 사인에 의해 체포된 현행범인을 인도받는 경우에는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는 주지 않아도 된다.

31. 수사상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없다.
- ② 수사기관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매체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정보 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우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다.
- ④ 수사기관은 피의자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할 수 있다.

32. 압수물의 처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형사소송법」 상 압수장물의 환부에 관한 규정은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주장함에 영향을 미친다.
- ②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써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
- ③ 압수한 장물으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 ④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

33. 「형사소송법」 상 피고인이 할 수 없는 것은?

- ① 관할이전의 신청
- ②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참여
- ③ 증거보전의 청구
- ④ 공소장변경요구

34. 수사상의 증거보전과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증거보전의 청구권자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다.
 - ② 증거보전절차에서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일시와 장소를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여 참여기회를 주지 않은 때에는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③ 증거보전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문을 청구할 수 없으며, 공동피고인 또는 공범자를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 ④ 검사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증거보전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35.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가 아닌 자는?
- ① 피해자 ‘본인’
 - ②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인 때 ‘피해자의 친족’
 - ③ 사기죄에 있어 ‘피해자에게 채권이 있는 자’
 - ④ 살인죄에 있어서 ‘피살자의 처(妻)’
36.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아닌 것은?
- ① 수사상의 증인신문청구권
 - ②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 ③ 진술거부권
 - ④ 증거보전청구권
37. 「형사소송법」 제253조 규정이다.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 때로부터 진행된다.
- ① 공소기각 또는 면소판결의 재판이 확정된
 - ②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 ③ 검사가 공소를 취소한
 - ④ 판결이나 결정이 선고된
38.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구속적부심문조서
 - ② 외국수사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 ③ 군의관이 작성한 진단서
 - ④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39. 구속기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피의자가 체포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 ②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하고, 구속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구속기간연장허가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연장기간은 종전 구속기간만료 다음날로부터 기산한다.
 - ④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지방법원판사의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
40. 체포·구속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긴급체포 등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도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석방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다.
 - ③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청구인, 변호인, 검사 및 피의자를 구금하고 있는 관서의 장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해 사 법 규

1. 선박안전과 관련하여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유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경우 관련되는 선박의 구조·설비 등에 대하여 받는 검사는?

- ① 임시검사 ② 예비검사
③ 특별검사 ④ 건조검사

2. 다음 중 「해사안전법」상 교통안전특정해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 ① 인천 ② 부산 ③ 동해 ④ 포항

3. 다음 중 「해양경비법」에 따라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 대간첩·대테러 작전
㉡ 선박등이 3회 이상 정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세력에게 집단으로 위해를 끼치려는 경우
㉢ 선박등과 범인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 공무집행에 대한 저항을 억제하기 위한 경우
㉤ 선박등의 나포와 범인을 체포하기 위한 경우로서 선박등과 범인이 선체나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경비세력을 공격하거나 공격하려는 경우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 ① ㉠, ㉡, ㉤
② ㉠, ㉡, ㉢, ㉤
③ ㉠, ㉡, ㉢, ㉣, ㉥
④ ㉠, ㉡, ㉢, ㉣, ㉤, ㉥

4. 해양경찰서 상황실장 갑(甲)은 행복호 선원 을(乙)로부터 선상 쟁의행위 신고를 접수하였다. 당시 상황실장은 동 신고사항에 대하여, 「선원법」상 쟁의행위가 제한되지 않는 사항으로 판단하였다. 다음 중 선원근로관계에 관한 쟁의행위가 가능한 경우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선박이 외국항에 있는 경우
② 여객선이 승객을 태우고 정박 중인 경우
③ 항구를 출·입항 할 때 선장이 선박의 조종을 지휘하여 항해 중인 경우
④ 위험물 운송을 전용으로 하는 선박이 항행 중인 경우로서 위험물의 종류별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

5. 「유선 및 도선사업법(시행령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유·도선 영업시간은 해 뜨기 전 30분부터 해 진 후 30분까지로 한다.
② 공공 목적으로 운항이 필요한 경우 영업구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해당 유·도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면허를 받거나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④ 연해구역 내에서 운항하는 유·도선은 기상특보 발효 시 운항할 수 있다.

6. 「유선 및 도선사업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에 관한 설명이다. ()안에 들어가야 할 숫자의 합은 얼마인가?

- ㉠ 승객 및 선원이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는 장소의 면적이 21㎡일 때 유선의 승선 정원은 ()명이다.
㉡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유·도선의 선령기준은 ()년 이하여야 한다.
㉢ 도선에 사람과 화물을 함께 승선·적재시키는 경우 승선 1명으로 계산하는 화물의 무게는 ()kg이다.
㉣ 승선 정원이 13명 이상인 유선에는 유선마다 선실·조타실 및 기관실별로 ()개 이상의 소화기를 갖추어야 한다.
㉤ 승객정원이 150명인 유선의 경우 유선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명구조 요원의 최소 인원수는 ()명이다.
㉥ 유도선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교육의 교육시간은 매년 ()시간 이내로 한다.

- ① 142 ② 146 ③ 147 ④ 152

7. 「유선 및 도선사업법」상 관할관청은 유·도선의 안전사고 예방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유·도선사업자에게 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조치명령사항 중 가장 틀린 것은?

- ① 승선 정원이나 적재 중량 또는 용량의 제한
② 선원의 증원 또는 교체
③ 운항 약관의 변경
④ 영업구역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 정지

8. 「해양경비법」상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해양 경비 활동 범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양 관련 범죄에 대한 예방
- ② 해상조업의 지원
- ③ 해양오염 방제 및 해양수산자원 보호에 관한 조치
- ④ 그 밖에 경비수역에서 해양경비를 위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9.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상 “(㉠)은 해수면에서 자연적, 인위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조난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수난구호를 위해 수난대비기본계획을 (㉡)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 ㉡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 중 가장 옳은 것은?

㉠ ㉡ ㉠ ㉡

- ① 해양경찰청장, 3년 ② 해양경찰청장, 5년
- ③ 해양수산부장관, 3년 ④ 해양수산부장관, 5년

10. 다음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상 중앙구조본부장의 관장업무이다. 가장 틀린 것은?

- ① 대규모 수난구호활동의 현장 지휘·통제
- ② 해상수난구호업무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 기관과의 협력
- ③ 수난구호장비의 확충·보급 등
- ④ 소속 구조대의 편성·운영 및 구조활동에 관한 지휘·통제

11. 다음 중 「어선법」의 목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어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성의 확보
- ② 어선의 성능 향상을 도모
- ③ 어선에 관한 시험·조사·지도 또는 단속
- ④ 어업생산력의 증진과 수산업의 발전

12. 다음 중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상 해양사고에 대한 정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박의 구조·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부상을 입은 사고
- ②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선박이나 육상시설·해상 및 내수면 시설이 손상된 사고
- ③ 선박이 멸실·유기되거나 행방불명된 사고
- ④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해양오염피해가 발생한 사고

13. 「선박직원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 ①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에 의하면 평수구역을 항행하는 1,000톤 여객선의 선장은 최저 4급 항해사 이상의 해기사 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 ② 외국에서의 선박직원에 관한 사무는 대한민국 영사가 수행한다.
- ③ 해양경찰청장은 대한민국 영해안에 있는 외국 선박에 승무하는 선박직원이 국제협약이 정한 수준의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긴급히 도서민을 수송하는 경우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을 완화하여 승무를 허가할 수 있다.

14. 「수산업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이 면허어업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수산자원의 증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선박의 항행·정박·계류 또는 수저전선의 부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③ 국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 ④ 수산업법 임대차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어업권을 임대한 경우

15. 「해양경비법」상 해양경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그 선박등의 선장에 대하여 경고, 이동·피난 명령 등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경우는?

- ① 근해수역에서 위험물의 폭발로 선박등이 좌초 위험에 처하여 인명·신체에 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 ②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의 수역에서 선박의 화재로 선박등이 침몰할 위험에 처하여 중대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의 우려가 현저한 경우
- ③ 원해수역에서 해상구조물의 파손으로 해양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경우
- ④ 연안수역에서 태풍, 해일 등 천재로 선박등이 파손 등의 위험에 처하여 인명·신체에 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16.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에 관한 설명이다.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 () (이)란 선박이 해상에서 일시적으로 운항을 멈추는 것을 말한다.
 ㉡ 예인선은 한꺼번에 최대 ()척의 피예인선을 끌 수 있다.
 ㉢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기적이나 사이렌을 장치한 선박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선박은 화재를 알리는 정보로써 기적이나 사이렌을 ()회 울려야 한다.
 ㉣ 모든 선박은 항로를 항해하는 위험물운송선박 또는 해사안전법에 따른 ()의 진로를 방해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① ㉠ 정류 ㉡ 2 ㉢ 장음 5 ㉣ 흡수제약선
 ② ㉠ 정류 ㉡ 3 ㉢ 장음 5 ㉣ 조정불능선
 ③ ㉠ 계류 ㉡ 3 ㉢ 단음 5 ㉣ 흡수제약선
 ④ ㉠ 계류 ㉡ 2 ㉢ 장음 5 ㉣ 조정불능선

17. 「선박안전조업규칙」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출입항 신고기관은 출입항 통제소, 출입항 신고소, 출입항 대행신고소로 구분하여 설치하며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지휘·감독한다.
 ② 신고소, 대행신고소는 그 항·포구에 거주하는 자 중에서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위촉하는 자가 운영한다.
 ③ 선장은 항해 또는 조업 중 의심스러운 선박이나 물체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정하여진 긴급보고제도에 따라 관할 해양경찰서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특정해역 및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어선들의 출어등록 유효기간은 2년이다.

18. 「해사안전법」상 도선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마스트의 꼭대기나 그 부근에 수직으로 (㉠)도를 비추는 등화를 상부의 것은 (㉡), 하부의 것은 (㉢)으로 각 1개를 달아야 한다.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 225 ㉡ 붉은색 전주등 ㉢ 흰색 전주등
 ② ㉠ 225 ㉡ 흰색 전주등 ㉢ 붉은색 전주등
 ③ ㉠ 360 ㉡ 붉은색 전주등 ㉢ 흰색 전주등
 ④ ㉠ 360 ㉡ 흰색 전주등 ㉢ 붉은색 전주등

19. 「선박안전조업규칙」상 어로보호본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양사고의 조사도 어로보호본부의 사무이다.
 ② 어로보호본부는 해당 해양경찰서에 소속된 경찰 공무원(경비합정 근무자는 제외)으로 구성한다.
 ③ 특정해역에 출입하는 어획물운반선은 어로보호 본부장이 통제한다.
 ④ 어로보호본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로보호본부에 어로보호협의회를 둔다.

20. 다음 중 「낙시 관리 및 육성법」상 낙시어선의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수습을 위하여 사고발생 보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 사고장소가 내수면인 경우에는 사고발생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고 사고의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고장소가 해수면인 경우에는 관할 ()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고 사고의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① ㉠ 시·도지사 ㉡ 지방해양경찰청장
 ② ㉠ 시장·군수·구청장 ㉡ 지방해양경찰청장
 ③ ㉠ 시·도지사 ㉡ 해양경찰서장
 ④ ㉠ 시장·군수·구청장 ㉡ 해양경찰서장

21.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상 수난 구호활동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가징수권자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지방해양수산청
 ② 경찰서장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④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

22. 다음 중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수상(水上)의 정의로 가장 옳바른 것은?

- ①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
 ② 담수의 수류 또는 수면
 ③ 해수면과 내수면
 ④ 해수면과 하천

23. 다음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상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외국인은 배타적 경제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조업자제해역 ② 어로한계구역
③ 특정금지구역 ④ 특정해역

24.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상 안전 검사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수상레저사업에 이용되는 수상레저기구는 (㉠) 마다, 그 외 수상레저기구는 (㉡) 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음 중 ()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 6개월 ㉡ 1년 ② ㉠ 1년 ㉡ 5년
③ ㉠ 6개월 ㉡ 3년 ④ ㉠ 1년 ㉡ 3년

25. 다음 중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상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청구는 사건이 발생한 후 ()이 지난 해양사고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하지 못한다.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3개월 ② 6개월 ③ 1년 ④ 3년

26. 해양경찰청 경비함정이 대한민국 선박이 아니면서 국적을 사칭할 목적으로 한국선박의 선박국적증서로 향해 중인 선박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경우 해양경찰관은 선박의 선장에게 어떤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가?

- ① 선박안전법 ② 선박직원법
③ 선원법 ④ 선박법

27. 다음 중 「선박법」상 선적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박소유자가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는 곳을 말한다.
② 선박소유자가 선박을 검사하는 곳을 말한다.
③ 선박소유자가 선박국적증서를 교부 받는 곳을 말한다.
④ 선박에 대한 행정감독상의 편의를 위하여 각 선박에 대하여 특정된 항구를 말한다.

28. 「항만운송사업법」상 “선적화물 및 선박(부선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증명·조사·감정을 하는 일”은 어떤 사업에 해당하는가?

- ① 감정사업 ② 검수사업
③ 검량사업 ④ 하역사업

29. 「수산업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의 내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구획어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수산업은 어업, 어획물운반업,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③ 어촌계나 지구별 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④ 면허어업에는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마을어업, 패류양식어업 등이 있다.

30. 「해양환경관리법」상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을 사용·저장 또는 처리하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를 작성하여 ()의 검인을 받은 후 그 해양시설에 비치하여야 하고,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에 따른 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시·도지사 ② 해양수산부장관
③ 환경부장관 ④ 해양경찰청장

31. 다음 중 「어선법」상 ()안에 들어갈 말을 알맞게 나열한 것은?

어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작동하여야 한다.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나거나 분실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에게 신고한 후 (㉡) 이내에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정상작동하기 위한 수리 또는 재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① ㉠ 해양경찰청장 ㉡ 15일
② ㉠ 해양수산부장관 ㉡ 15일
③ ㉠ 해양경찰청장 ㉡ 7일
④ ㉠ 해양수산부장관 ㉡ 7일

32. 다음 중 「낙시 관리 및 육성법」상 낙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상악화 등의 경우에 낙시인에게 안전한 장소로 이동을 명할 수 있는 자는?

- ① 해양수산부장관
②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서장
③ 시·도지사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
④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33. 해양경찰청 경비함정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발견하였다. 다음 중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상 취할 수 있는 조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상봉쇄 ② 추적권 행사
③ 정선 및 승선 ④ 검색 및 나포

34. 다음 법령 중 소관(所管) 부처가 해양경찰청인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 ㉠ 수상레저안전법
㉡ 선박안전법
㉢ 해양경비법
㉣ 해사안전법
㉤ 수산업법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35. 다음 중 「수상레저안전법」 상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알맞은 것은?

- ㉠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는 등록 후 ()년
마다 정기적으로 검사한다.
- ㉡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추진기관의 최대 출력이
()마력 이상인 것을 말한다.
- ㉢ 출발항으로부터 ()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① ㉠ 3년 ㉡ 5마력 ㉢ 10해리
② ㉠ 3년 ㉡ 10마력 ㉢ 5해리
③ ㉠ 5년 ㉡ 5마력 ㉢ 10해리
④ ㉠ 5년 ㉡ 10마력 ㉢ 5해리

36. 다음 중 「수상레저안전법」 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정의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는 기구
- ② 5마력 이상의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는 기구
- ③ 10마력 이상의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는 기구
- ④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 추진기관의 부착 또는 분리가 수시로 가능한 수상레저기구

37. 다음 중 「해사안전법」상 항해 중인 동력선이 서로 상대의 시계 안에 있는 경우에 행하는 기적신호의 횡수로 가장 옳은 것은?

- ㉠ 침로를 오른쪽으로 변경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음 () 회 이다.
- ㉡ 침로를 왼쪽으로 변경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음
() 회 이다.

- | | |
|--------|------|
| ① ㉞ 1회 | ㉞ 1회 |
| ② ㉞ 1회 | ㉞ 2회 |
| ③ ㉞ 2회 | ㉞ 1회 |
| ④ ㉞ 2회 | ㉞ 2회 |

38. 다음 중 「해사안전법」상 용어의 정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박이란 물에서 항행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배(물 위에서 이동할 수 있는 수상항공기와 수면비행선박은 제외)를 말한다.
- ② 거대선이란 200m 이상의 선박을 말한다.
- ③ 고속여객선이란 시속 15kt 이상으로 항행하는 여객선을 말한다.
- ④ 동력선이란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을 말한다. 다만, 돛을 설치한 선박이라도 주로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동력선으로 본다.

39. 다음 중 「해사안전법」의 목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체계의 확립
- ② 선박항행과 관련된 모든 위험과 장애의 제거
- ③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힘으로써 해양안전의 확보
- ④ 해사안전 증진과 선박의 원활한 교통 확보

40. 「영해 및 접속수역법(시행령 포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영일만, 남·서해안 등에서 직선기선을 보조적으로 사용한다.
- ② 외국군함의 사전통고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 ③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통상의 기선은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축척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을 원칙으로 한다.
- ④ 대한민국의 접속수역은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24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으로 한다.